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784
----------	------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김 은 영 의원 (인)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부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실상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8년 11월 20일 ~ 11월 28일(8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6. 부서협의 결과 : 적합

7. 관련부서 : 기업지원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3년 3월 24일 하남시 덕풍동 지역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란 2013년 3월 24일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하남시 덕풍동 일원의 피해지역내에서 발생한 부상 등 인적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 등 물적 피해를 말한다.
2. “위로금”이란 제2조제1호의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2013년 3월 24일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하남시 덕풍동지역 일원을 말한다.

제3조(위로금의 지급)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스폭발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피해로 한정한다.

제4조(위로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로금 지급대상 및 범위
2. 피해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하남시 공무원 3명, 하남시의회의원 2명, 관

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⑧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로금 지급 완료시까지로 한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로금 수령권자)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제7조(지급의 제한) 위로금은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피해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로금 결정) 위로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로금 결정의 통지) 위로금 지급이 결정된 즉시 수령권자에게 위로금 지급 결정서를 동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지급청구) 수령권자는 위로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위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로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